

수협 “中 현지법인 세워 수산물 직판 추진”

한중 FTA대비 업계대책 분주

안전성 확보-브랜드가치 유치 목적... 김•어묵 등 민간 기업도 수출 고삐

“관세 철폐 대비 조기 공략 필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중국에 수협 현지 법인을 설립해 한국산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생산 기업들도 잇따라 중국 진출을 선언하는 등 수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민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협은 내년 중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중국에서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수협은 현재 중국 상하이(上海)와 칭다오(靑島) 등 두 곳에 수출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비준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에 강점을 지닌 한국 수산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협이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수산물을 현지 중간 상인에게 넘겨져 유통되고 있다. 한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지키고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협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수협은 중국에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운영하는 단기 매장을 설치해 운영한 다음, 그중 일부를 정식 한국 수산식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중 중국 완다(萬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페이판왕에 한국 수산식품관을 개설해 국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지원한다. 또 중국 수출 수산물을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개편하고, 중국 내륙 시장 개척을 위해 6개월에 한 번 민관 합동 수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수산물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해수부의 중국 수산물 시장 공략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한중 FTA 때문이다. 해수부 측은 “한중FTA가 비준되면 김과 미역, 넙치 등 62개 수출 수산물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0년 내에 사라진다”며 “이 때문에 중국 시장을 조기 공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9년 30kg에서 2020년 40.8kg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동아닷컴 (2015-09-17)